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-38호

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15년 12월 14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사유

「비조치의견서 내실화 방안」(’15.9.30)의 후속조치로서 신청인 범위 확대, 공동 신청 제도 및 조건부 답변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등의 소통창구로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역할을 강화하고, 신청의 편의성과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신청인 범위 확대(제2조)

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을 금융이용자(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)로 확대함.

나. 금융협회 등을 통한 신청 가능성 명시(제5조제2항)

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신청서 양식 통합(제5조제3항, 별지제1호서식)

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통합 요청 양식을 마련함.

라. 공동신청 제도 도입(제5조의2)

다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도록 함.

마. 조건부답변 도입(제6조의2)

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등 조치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.

바. 비공개기간 상한 설정(제12조제2항)

비조치의견서 공개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최장 120일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회신문 공유를 촉진함.

3. 기타 참고사항

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sc.go.kr>) ‘지식마당-법령정보-고시/공고/훈령’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